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계 창작 환경 어떻게 달라지나

글 구보라 PD저널 기자(9bora@pdjournal.com)

Broad
casting
방송

“10여 년 전, SBS에서 막내작가 한 분이 본사 옥상에 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의 비참한 선택을 조명해야 할 언론이 자신들의 치부가 두려워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른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전태일 열사처럼 내 몸에 불이라도 지르고 방송국 앞을 뛰어다녀야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까, 방송 노동자의 처지가 개선될까, 하고, 아직 용기가 없어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외면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1월 24일, KBS 구성작가협의회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던 글 중 일부다. 방송사에서 작가로 일했던 글 쓰이는 이 글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뉴스타파-목격자들’에서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2016년 ‘방송작가 노동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등에서도 이미 밝혀졌다. 보고서를 보면, 당시 보조작가 시급은 평균 3880원, 응답자의 68.8%가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방송이 되지 않겠다는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방송작가의 업무 영역이 아닌 일까지 강요받는 경우도,



정부부처는 방송사와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PD저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는 것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임금체불은 일상적이었다.

다른 노동자들처럼 매일매일 방송사로 출근하고, 글을 쓰고, 섭외를 진행했지만 방송작가들은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였다. 그래서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언론에서는 방송작가들의 열악한 처우에 집중해 기사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가장 최근까지도 방송작가들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다시 방송사의 불공정관행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16년 10월 tvN ‘혼술남녀’의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PD가 불합리한 방송 시스템에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7년 7월에는 방송사의 불공정한 외주제작 시스템을 폭로했던 박환성 독립PD가 다큐멘터리 촬영차 떠난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방송사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불공정관행 개선될까

그때부터였다. 8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방송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정부부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송사-외주제작사 합동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나왔다. 해당 종합대책은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과 제작비 산출, 방송제작 인력의 안전 강화와 인권 보호, 표준계약서 제정과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된 건 처음이었다. 무엇보다도 방송사의 이행을 위해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앞선 조건들을 포함시켰기에 예전과는 달리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대책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부터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와 구제를 위한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와 법률 상담 등이 가능하다. 법을 통한 변화 움직임도 있다.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투명한 협찬을 위해 방송협찬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계 불공정 관행을 밝혔다. [사진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파란 리본을 단 카메라들이故 박현성 PD의 카메라를 둘러싸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독립PD협회]

장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처음으로 방송작가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발표했다. 총 7종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가 있었지만 방송작가가 대상인 표준계약서는 없었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에는 방송작가와 방송사 혹은 제작사 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해 작가가 방송사나 제작사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고료 부분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명확한 금액과 지급 시기, 원고료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원고비 미지급을 근절하고자 했다. 원고료 지급보증 규정도 마련해 원고료 미지급 문제 발생 시 방송사에게 원고료 지급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 취소하는 행위,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시키는 행위, 원고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 등도 금지되며 방송작가의 저작권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표준계약서 작성 아직은 권고 수준

방송작가의 권리를 지키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으니, 이젠 표준계약서의 실질적인 사용 확대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집필 표준계약서는 권고일 뿐 당사자들에게 강제할 순 없다. 당장 높은 사용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진 않는 이유다.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이나 펀드 등을 통해 방송드라마 분야 출자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방송진흥기금 융자금리까지 낮추는 등 인센티브 제공까지도 약속했다. 실제로 영화산업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우대조건을 만들자 사용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사례가 있다. 2011년에 영화산업 표준계약서가 제정됐음에도 그동안 사용률은 현저하게 낮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사용 확산 방안 마련에 대해, 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11월,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조합을 결성한 방송작가들은 "방송사나 제작사들은 집필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기 전에도 서면 계약

66

지금부터라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방송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상생, 그리 먼 일만은 아닐 것이다. 10년 뒤인 2028년에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송 노동자들의 절규가 아니라, "2018년부터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길 바라본다.

99

서를 쓸 수 있었지만 무관심했다. 시행 강제를 위해 문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에는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집필 표준계약서는 '집필'을 하는 '메인작가'만 대상이 되기에 또 다른 표준계약서 제정도 요구되고 있다. 메인작가가 아닌 자료조사, 프리뷰, 홍보 문구 작성, 섭외전화 등을 진행하는 많은 작가들은 해당 계약서를 쓸 수 없다. '집필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송 종사자 연대로 이어져야

2018년 1월, 고 이한빛 PD를 기리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출범했다. 한빛센터에서는 불공정 사례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이 이뤄진다. 한빛센터의 출범을 축하하며 방송작가노조는

"방송계의 불공정관행은 왜 개선되지 못한 걸까? 한빛센터는 그 답을 찾아 실천하고자 한다. 그 답은 바로 방송 종사자들의 연대"라고 지적하며 연대의 중요성을 짚었다. 방송 노동자들이 부당한 점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이유기도 하다.

더 기분 좋은 소식도 있다. 서울시는 tbs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에 앞서 1월에는 tbs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생겼고, 이 밖의 수많은 방송사 비정규직들도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긍정적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송사의 인식과 제도 개선이다. 그래야만 방송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 변할 수 있다. 지난 12월 정부가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직후, 12월에는 tvN 드라마 '화유기' 세트장에서 스태프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방송사의 '상품권 폐기', '출연료 깎기', 방송작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방송사가 먼저 나서서 불공정관행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없애지 않는다면, 진정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1년 뒤에도 현실은 그대로일 확률이 높다.

누군가 다치거나 죽지 않아도 방송콘텐츠산업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근로조건' 아래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결국 사람들이 보기 위한 콘텐츠를, 사람들이 만드는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방송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상생, 그리 먼 일만은 아닐 것이다. 10년 뒤인 2028년에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송 노동자들의 절규가 아니라, "2018년부터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길 바라본다. ①

방송작가들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송작가지부가 2017년 11월 11일 출범했다. [사진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